

| 긴급대담 |

# 사회적 대화 현주소 진단과 전망은?

## 신뢰 구축을 향해 가는 과도기

- **일시** 2019년 4월 12일 오후 4시
- **장소** 경사노위 7층 중회의실1
- **사회** 이덕재 경제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발제**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 **참석**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배석**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무관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촛불정부가 출범했고, 이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출범과 함께 변화 모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본위원회의 무산 등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한 위기론도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우리사회의 내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긴급대담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어봤다.



## 사회적 대화, 어디까지 왔나

**이세종** 오늘 긴급대담은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 진단과 전망을 위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탄력근로제 본위원회 의결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돌과 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해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합니다. 이덕재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를 보고 손영우 전문위원이 발제를 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영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초에 양극화를 극복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자 경사노위를 만들었습니다. 노사 중심성 강화, 초기업 수준의 사회적 대화 증진, 취약계층의 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것인지 진단해 보

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13년부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자는 노사정위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다가 이번에 경사노위가 설립되면서 본위원회에 노·사 3인씩 취약계층 위원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대두되자 갈등양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는 관점과 해결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대화의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당장 올해와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디까지 왔는가의 문제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을 2017년 말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과정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희망을 걸고 만났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대도 높았고 노사주체들 간의 공감대도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현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공항·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사법 개정 등 주요 노동 개혁이 사회적 취약계층 간의 효과적인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노동문제를 둘러싼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잘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진행되고 만들어냈던 것들도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기틀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합의로 나타나기도 했고 논의 의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덕재** 경사노위 내부에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장지연 부원장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로 먼저 시작 했어요. 고용보험, 실업부조,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정책들을 다루는 위원회로 출발했는데 거기에 노사와 전문가, 정부측에서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가 참여를 합니다. 기재부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는 틀로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것을 국민 간의 합의, 노사 간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슈별로 그렇게 구도가 짜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본위원회 참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은 제가 몸담고 있는 위원회와는 관련이 적고 구도가 다른 문제에서 터진 이슈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맡은 것이 연금개혁특위입니다. 연금 문제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에서 다루기로 했다가 그 자체가 큰 이슈로 부각하면서 시간도 촉박하고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서 독립한 경우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부터 특이합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본위원회의 모습을 가장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가 2명, 노사대표 이외에 공익위원은 3명뿐입니다. 비사업장 가입자인 노인, 여성, 소상공인대표 등 각계의 연금과 관련한 자신의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들을 대표하는 분들을 망라하는 식의 구성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한 차례 흥역이 있었고 시작하고 나서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이게 마무리가 될까, 의견이 모아질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을 크게 벌였기 때문에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만약 마무리한다면 뒷일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물론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았습시다만 민주노총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각 계를 망라하는 멤버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담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의체 안에서 이것이 다 실현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제 소회입니다.

**이덕재** 초창기에는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했었죠?

**장지연** 네. 두 위원회 모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위원회 시작할 때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자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 의견에 따라 의제가 선정 됐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다뤄달라고 해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노사와 전문가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발족하자고 한 것도 민주노총이 제시한 안인데 의견만 제시해 놓고, 구성만 해놓고 참여를 못해서 피차 아쉬운 상황입니다.

## 단체교섭 방식에서 법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덕재** 그러면 임상훈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임상훈** 장지연 박사께서 말한 것처럼 거시적 흐름에서 경사노위를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노사관계를 가르치다 보면 역사적으로 흐름을 훑어보는데,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30년 단위로 끊어 보면, 예를 들면 60년부터 90년, 90년부터 2020년. 앞으로 올 2020년부터 2050년을 보면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60년부터 90년은 경제개발, 독재정권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 때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를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87년, 88년, 89년 노동자대투쟁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당시는 한국노총이 어용노조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런데 87년, 88년, 89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에 노동체제가 변화하면서 30년이

지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이제까지 국가경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셈이었고 재벌들이 예전처럼 돈 빌려서 운영했다가 IMF 외환위기가 오고,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30년이 지나면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조직노동으로는 지금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노조조직률 10% 가지고는 안 된다, 조직노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교섭인데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화되지 못한 90% 노동자들의 문제가 남습니다. 사용자측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닌 하청, 을의 사용자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인데, 미조직 노동자나 을 사용자의 이해를 노조나 단체교섭 제도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이들이 주체가 돼서 노동사회를 만들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경사노위라 하는 것은 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만들어진 체제에서 비기득권 층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노동사회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경사노위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보면 단체교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노동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단체교섭과 법제도 개선은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입니다. 단체교섭은 조직노동이 자신의 파워를 가지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

면 노동자 내부에서 강한 노동자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임금, 근로조건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중에서 을, 사용자 중에서 을. 비조직 노동자, 사용자 중에서 하청 사용자, 이들의 이해 대변은 최고치가 아니라 법제도를 통해 최소치를 만드는 작업일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단체교섭을 만드는 역동 메커니즘과 법제도를 만드는 데서 노사의 의견이 개입되는 메커니즘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빼먹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념해서 볼 부분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에서, 지금 조직노동 또는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 등이 여전히 예전 시각으로 경사노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관료들이 촛불혁명을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관료들은 예전의 사회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속에서 타성이 있습니다.

결국 경사노위의 주체인 노사정 모두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메커니즘에서 타성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 타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변화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은 경사노위가 없어야 하나, 있어야 하나, 이런 논의보다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경사노위, 그 속에서 참여, 운영방식,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덕재**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임상훈 교수께서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 전략적 선택론에 가깝고, 노중기 교수께서는 구조주의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의 구도가 자연스럽게 잘 형성 되는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노중기** 저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던 비판적 연구자였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겠지만 구조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구조적 비관론이랄까요? 92~93년부터 시작해 30년간 진행된 많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는 노사정 대화정치가 우리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어요.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그 해, 2017년 초봄에 현재 집권세력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노동 존중을 말했다고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집권 직후 대통령의 첫 내부행사가 일자리 사업이었고, 첫 외부행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발표와 인천공항 방문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하반기에 정부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해 경사노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냈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 보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흐름이 노정 양쪽에 공히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든 것은 무엇보다 촛불이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변화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저도 비관적인 구조론을 벗어나서 의욕적으로 참여론이나 전략론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과 연관돼 있는 정치 지형, 이른바 계급 세력관계가 크게 달라졌다고 봤습니다. 단적으로 수구적 보수정당이 내적으로 분열되었고 서로 갈등해서 크게 약화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뒷받침하는 재벌세력들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정치적 힘을 상당부분 잃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집권세력 내 개혁파들의 입지는 크게 넓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주된 흐름은 경쟁력을 올리는 방안, 곧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명백히 안정성과 개혁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가 확산돼 젊은이들이 아이도 안 낳고 못 살겠다고 하니 이걸 보완해야겠다는 기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일변도 정책과는 명백히 다른 흐름이었죠. 이게 집권을 위해서 그랬다면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촛불의 결과라는 점이 저로서는 중요했습니다.

저는 구조지형 변동을 포함한 이런 조건들의 변화에서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 오기 힘든 좋은 찬스이고 잘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 정부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정당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한국노동사회가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끝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부가 주장했던 선거공약 사항인 노동존중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적 원인은 작년 하반기 넘어오면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갈라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핵심에는 정부정책의 우경화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민주노총의 불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덕재** 전체적으로 노중기 교수님 생각에, 큰 흐름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교수께서 받아주시죠.

**임상훈** 저도 노중기 교수님처럼 작금의 사태의 기원적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냐, 관료냐 했을 때 저는 달리 봐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부이고, 어떤 입장을 가진 정부 내의 집단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경사노위로 오는 데서도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동일한 이익, 단일한 입장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 내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한국노총 다르고, 민주노총 다르고, 조직노동과

비조직노동 다르고. 그래서 저는 노 교수님 말씀에 따라 정부의 책임인데, 추상성을 높여서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형식의 노동정치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누가 원할까 하는 식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누가 제일 즐거워할까,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 노동자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두고 ‘이게 더 나한테 나아’ 이런 노동자들이 있을 수 있죠, 사용자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노동자 집단이 있을 것이고, 사용자 집단이 있을 것이고, 정부 집단이 있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경사노위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알려들이 많았을 텐데 마지막 위너는 노동부가 됐다는 것이예요. 노동부가 위너가 된 것이 정말 노동정치에 있어서 도움이 됐는가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예전의 촛불 정부 이전에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대통령을 자문했다기보다는 노동부장관을 자문한 정도였던 것이 잦아요. 그래서 촛불혁명 이후에 경사노위를 새롭게 정립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 자문기구로 경제사회 이슈들을 논의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사노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여전히 고용노동부가 좌지우지하는 방식이 되면서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촛불혁명 이후의 경사노위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발했고 지금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 없나보다. 이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어렵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추상성을 높여서 전체 정부를 보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집단과 안타까워하는 집단이 정부 내에 공존하는데 정부 내의 안타까워하는 집단을 발굴하고 활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내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안타까워하는 사용자들을 끌어들이어야 할 것이고, 노동자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조직노동 중에서 특히 민주노총,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경총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노사정 관계에서 물론 신뢰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안 믿습니다. 민주노총 내에도 법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한 집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한 노조, 건설노조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에 반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같은 경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은 경사노위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장지연** 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손에 잡히는 답을 들은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단계 논의 의제가 현 주소 진단인데 경사노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대화는 이러저러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현재는 이 정도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가 첫 번째로 이야기 됐으면 좋겠어요.

**손영우** 저도 첨언을 하자면 앞서 노중기 선생님께서 정부와 민주노총이 ‘갈라섰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임상훈 교수께서



**손영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말씀 하신 것처럼 정부도 하나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듯 민주노총 안에서도 각 세력이 존재합니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별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산별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각 주체 내부의 역관계를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상황은 유동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대화 안에 민주노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 측에서 한국노총은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의견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위원회에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 분들의 생각도 사회적 대화 중단이 아니에요. 자신

들이 대표하고 있는 계층은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측 역시도 소상공인 계층,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은 사회적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건강보험이나 사회안전망을 보면 노사단체뿐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여 이전엔 자신들이 정치과정에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경사노위를 계기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노총이 노동의 중요한 대표 중 한 주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적 대화나, 시민적 대화에서 다른 영역의 공간이 열려있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중기**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지요. 또 각 주체 내부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일하지 않습니다. 정부에는 개혁파도 있고 보수적 관료층도 존재하지요. 또 노동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물론 미조직부문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나아가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적은 집단과 많은 집단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촛불의 요구에서 시작된 정부의 대국민약속, 노동존중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저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비관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주체들이 많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에 관건적 주체가 민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정파들의 갈등 때문에 민주노총 참가가 쉽지 않으니 그 책임이 노동 측에 있다고 주장해선 안 됩니다.

그걸 당연시 하고, 그 조건 위에서 고민하는 게 경사노위나 정부의 개혁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안에 서로 대립하는 참여파와 불참파가 있는데 그걸 감안한 정치를 경사노위에서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정부와 경사노위 내부의 노동개혁분파가 민주노총 참여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지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경사노위인데, 그것이 더 이상 기다려볼 여지없이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더 이상 기다려볼 여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노중기** 현재의 경사노위나 정부 여당의 기본적 방침이 심각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정부 임기 내에 원래의 노동존중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대선의 국가정치 일정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덕재**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지표라고 하면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초창기의 움직임들, 그 동력과 맞물려 일이 진행됐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서 전체적 그림 자체가 깨지고, 작년에 고용동향 쇼크, ILO, 탄력근로 이런 이슈까지 증폭이 되면서 노중기 교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의 판이 깨졌다,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추동하게 하려했던 주된 동력이 민주노총이지 않았을까요.

**손영우** 저는 민주노총의 결정을 오늘날 그 조직을 둘러싼 상황에서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논의 과정을 보면 변한 게 있다고 봐요. 민주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 참여로 큰 충격을 받았고 99년에 확실히 탈퇴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 논의를 꺼냈고 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실제 경사노위를 설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상황에서만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만큼 좌충우돌하고 부침이 있었지만 사회적 대화의 대한 고민이 진전되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진 게 지난 20년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촛불혁명과 정부 초기 노동존중사회를 요구하는 열망에 따라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직 참여 결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무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경사노위는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협의기구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쟁 중이고 향후에 어떻게 변하고 발전될 것인지는 이후 정세와 민주노총의 고민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과정

**임상훈** 노동존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2017년, 2018년판 새로운 노동사회에 대한 그림이라고 봐요. 변화가 계속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사노위가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종속된 것으로 해석된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하필이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인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이야기했으니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노동존중사회에서 촛불혁명이 이야기했던 것은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촛불혁명 때 나왔던 '이게 나라냐'의 구호도 지금까지의 체제, 관습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17년, 18년 버전이 노동존중사회인 것이죠.

기존의 체제가 그대로 가는 것은 쉬워요.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기득권층이 반발할 텐데,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만들려면 비기득권층이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지금의 실패 원인은 그 비기득권층이 단합하지 않고 약자들끼리 싸운 거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싸우는 방식인 것이죠.

노동자도 사용자도 단일한 이해를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략적 선택이 나온 것이에요. 단일한 이해를 가진 집단이면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그런데

전략적 선택은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안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산물로 합리적 방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를 향해 나가면 비기득권층이 이기는 것이고, 기득권층이 이기면 기존 실력과 비슷한 옵션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이 전략적 선택이에요.

**노중기** 사회적 대화가 깨지면 민주노총은 잘 된 거냐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운동에도 매우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현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민주노총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사노위든, 민주노총 지도부든, 청와대 개혁파든 민주노총 참여파가 다수파가 되어서 경사노위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손영우** 사회적 대화 참여 문제가 너무 경직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가져요. 대의원대회 때 참여를 결정했다라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면에 따라 불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현 정국에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둘러싸고 정부에 대해 대처하는 이런 유연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상훈** 민주노총 내에 정말 사회적 대화나 경사노위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교섭으로 해결을 못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사람들이 경사노위 불참 방침에 따라 발목이 잡히는 거죠. 경사노위는 어찌 됐건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의견이 반영되는 경로는 있어요. 저는 약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조직 내에서 이 부분이 필요한 그룹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은 그룹이 양해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단결력이 필요하고, 이 단결력은 리더십이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정말 안타깝죠.

**장지연**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는 현 상황을 전제했을 때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최선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민주노총이 없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도 최선이 아니라면 그밖에 다른 문제도 짚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노중기** 지금 손 선생님 말씀, 장 부원장 말씀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가 굴러가도 되지 않는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화 그 자체의 유의미함을 생각하면 민주노총 참여 문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한편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들어오는 게 왜 중요하냐를 따져 봐야 합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대화의 문제는 87년 이후 새로 등장하였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사회세력, 즉 민주노총과 우리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87년 노동체제 시절에 민주노조운동은 그 자체로 불법이었습니다. 또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파업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노동사회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이 사회적 대화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총연맹단체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인 민주노총에 경찰력을 투입했고 위원장과 많은 활동가를 투옥했습니다. 한국에서 거시노동정치의 핵심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곧 자유주의적인,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민주노총 조직이 있습니다. 민주화 30년이 된 지금 민주노총은 서구처럼 안정적인 제도적 파트너, 사회적 기구로서 총연합단체가 되어야 하나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동존중의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은 자유화 된 이후, 87년 이후에 우리는 민주화 됐다고 하는데 노동문제 관해서는 서구 최소기준의 민주화가 적어도 관철이 안 되는 사회예요. 적어도 민주노총에 대해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 우리 사회 자본의 중심이 수출대자본인데 그걸 조직하고 있는 게 민주노총이에요. 철도, 지하철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야죠. 지금까지는 모든 정치세력이 그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온 거예요.

이런 역사적 흐름에 대해 민주노총은 불신이 많죠. 과거 민주노조들은 사회적 대화 열심히 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부와 자본은 대화참가를 빌미로 비정규직 만들어 늘리고 민주노조들을 탄압하기만 했어요. 과거 사회적 대화기구의 한계였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정권에서 새로 집권하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고 민주노총의 참여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노동정치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대화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90%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임상훈** 민주노총 중에서 힘 있는 조직은 최소수준을 끌어올려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경사노위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 노동자들이 경사노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은 비조직 노동자들 90%가 있는데 이들에게 사회적 대화기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조직노동은 강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경사노위에 와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봐요. 10%의 조직화된 주도 세력은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90%는 경사노위에서 지금의 법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사노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노중기** 임 교수께서 민주노총 내부를 약자 집단, 강자집단 이렇게 나누고, 갑을로도 나누시고, 기득권 비기득권으로도 나눴는데 약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동운동의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중요한 부작용은 내부에 참여파와 비참여파를 끊임없이 갈라내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조직 차원에서 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또 그 안에서 참여파와 비참여파 갈라내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운동 통제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20년 노동시장 분절화, 곧 비정규직 고용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대응을 했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공공노조 정규직 조합원이 유일하게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1/3이 비정규직이지요. 최근까지 비정규직 문제, 약자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사회적 실천

이나 노력은 민주노총 외에는 한 집단이 없어요. 민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총자본, 재벌자본의 반대를 뚫어야 하고 이들의 정치적 반발을 넘어서야 해요.

경사노위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겁니다. 제도를 만들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같은 소수자들 의견을 듣고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 합의안으로 제출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의미는 있죠. 경사노위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축적해온 지식 자원, 네트워크 자원 등이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제기했던 노동존중사회를 이 정부 안에서 실현하는 것은 이제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이덕재** 임상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기화 되면서 전통적으로 조직 노사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들이 그 틀 속에서도 소회할 수 없는 문제나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덕재** 경제사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늘 오전에 장지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연금특위 논의를 봤습니다. 여기서도 오히려 조직 노사가 마이너리티더군요. 거기에는 청년 대표도 있고, 복지네트워크, 소상공인단체, 여성연합단체, 연금행동, 은퇴자협회에 공익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주제를 조직 노사가 10% 노조조직률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0%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이슈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분야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논의가 조정 되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탄력근로제 논의 때에는 노사, 공익 딱 3명 있고, 철저하게 조직 노사 중심으로 논의를 했어요.

개편된 경사노위에서 특히 미조직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해서 본위원

회 멤버 18명 중 민주노총 빠진 17명인데, 공익위원이 네 분이고 취약계층 본위원이 노사 각 3명이어서 열 명이예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과반으로는 조직 노사보다 많아요. 본위원회 구조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여성, 청년, 비정규 계층위원회도 꾸리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최대한 부르는 거죠. 국민연금특위의 회의를 보면 그게 반영되는 모습이에요.

**임상훈** 국민연금특위가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봐요. 동일한 이슈라도 조직노동 중심으로 이슈파이팅 되는 것과 비조직노동이나 사용자측에서도 재벌이 아닌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국민연금 논의를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향으로 잡으면 조직노동이 개입 되어서 반대투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비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 입장이 반영되고 미니멈들이 향상이 되는 이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룹들은 유인하는 부분은 조직노동이 중심이 돼서 이슈파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입장에서 이슈파이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번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이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은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이들은 본회의에서 나가라고 해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본회의에서 취약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움의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조직 능력이 없으니까 논리력으로 싸워야죠. 노동연구원 발표 보니까 탄력근로제가 취약노동자들에게 적용 될 때 문제가 심각하던데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처리 못한다고 싸워야 하는 거죠.

경사노위에서 취약계층이 어떤 이슈파이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는 거죠. 다음 번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덕재** 사회적 대화하면 기본적 틀이 만장일치 합의 구조잖아요. 교섭당사자 일방이 동의

를 안 해주면 깨지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당사자가 동의가 되어야지 이뤄지는 것이니까 기업 수준이든, 산별 수준이든 합의주의적인 교섭 구조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된다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의 공론화 과정, 의견들을 모어나가고 사회 갈등 기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임상훈** 노사 관계에서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회적 협의와 관련해서 법제도 개선안이 나와도, 그 결정은 정부나 국회가 해요. 여기서는 논의를 할 뿐이죠. 다만 논의를 할 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받는 정부나 국회가 이 결정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덕재**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의 무게감과 의미는 동의합니다. 다만 새롭게 개편된 체제에서 실제로 국민연금특위 같은 협의, 자문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작동되고 있거든요. 본위원회 구조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 탄력근로제 문제의 경우 1/2 의결구조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민주노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직 노사의 이해가 맞물리면 다양한 계층의 단체들이 와서 논의하는 주제들에 있어서 충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의결방식과 위원회 간 관계 재정립

**손영우** 경사노위 만들고 나서 사회적 대화기구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 문제의 지점이 노사정이 진행하는 사회적 대화와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적 대화를 모두 포괄하는 있는 중첩적인 상황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제, 의제가 넓어지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탄력근로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빠져 있지만 조직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의제별위원회에서는 합의 했지만 본위원회에서 노측 취약계층 위원 3인이 반대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가령 건강보험 문제 같은 경우 본위원회 구성 주체보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 합의를 했으

면 본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결정했는데 본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자들이 이를 수정 혹은 의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대화기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의결방식의 문제와 본위원회와 의제별·업종별위원회 간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장지연** 각각의 하위 소위원회 내지 분과위원회는 그것이 다루는 이슈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구성원이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많이 고민해 조직되고,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때 바람직하기로는 본위원회 구성을 가장 유사하게 닮은 그런 조직으로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손영우** 본위원회의 구성 분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의제별·업종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장지연** 본위원회 안에 여성, 청년, 비정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위 위원회도 그것을 닮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방법 중에 거꾸로 출범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직을 했다면 전적으로 그 결과를 위임받는 방식으로든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임상훈** 두 가지 방식과 상관없이 공통점은 밑에서 만들어 나가면 위에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장지연** 그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덕재** 의결구조나 운영방식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사정위원회법이었던 경사노위법은 임의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지면서 영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 관계가 통상적으로 상하관계로 이해하고 운용을 해왔는데,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경사노위법상으로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수평관계예요, 물론 법형식 논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위계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손영우** 제도개선 자체가 사회적 대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수준인데요. 현재 문제가 됐다고 해서 법을 바꾸자고 접근하기 전에 사회 주체들의 논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배경인데요. 그 당시 법을 다소 추상적으로 만들었다면 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체들이 합의 수준이 그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었는데요. 사회적 대화의 진전에 따라 법과 규정 역시 발전한다고 봅니다. 즉 저는 당시



합의 수준을 넘어서야 할 만큼 사회적 대화가 진전됐다고 평가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상대를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적 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재** 우리 사회가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한 물적 조건이나 제도적 조건도 취약하지만, 기본적 신뢰가 더 취약하다고 봅니다. 다 밝히긴 힘들지만 본위원회 무산 과정에서도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과도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상훈** 일부 정치세력과 관료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실이 리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ILO 비준과 관련해 이슈파이팅을 하는 겁니다. 선비준이나 선입법이나를 놓고 합의되고 나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에서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이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이 논의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치적 쟁점화 시키면 또 한 번의 굴곡과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사노위에서 전문위원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패로부터 배웠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이 이슈파이팅을 해서 누가 들어도 맞는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1개월 내에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도 전문위원실이 판단할 경우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정부나 국회에 설득 작업을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아니고서 못해요.

**장지연** 특정 이슈에 대한 합의를 성과라고 카운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민을 얻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이 전체를 하나의 정치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온 후에 땅이 굳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과 내지는 합의를 얻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얻은 합의가 훨씬 더 소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졌으면 합니다.



**노종기** 지금까지 제가 조금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경사노위와 사회적 대화기구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노동지옥사회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다음 세대로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심각한 잘못입니다.

저는 장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 1년간 뭐가 문제였는지 주체들이 냉정하게 돌아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기구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경사노위의 정치적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처음 만들 때 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는데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료의 반발이 정말 문제라 하면 관료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만큼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인데 1단계가 실패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훈도 얻고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플랜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실패하고 나면 조직이 힘을 잃고 식물기구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과거의 과제인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선진국처럼 최소한 수준의 노자가 힘의 균형을 갖는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산별노조 문제도 걸려 있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손해배상소송 문제도 있어요. 이미 노동부의 행정개혁조사위원회가 이 부분에서 많은 조사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과제로 경사노위에서 비정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정규 사용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하려면 이 문제의 강력한 반대자인 재벌대기업의 반발을 넘어서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파워가 막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질곡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막대

합니다.

**이덕재** 충분히 중요한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내부 기술적인 것은 경사노위 안에서 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과 입장을 들어보고, 되짚어보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